

## 국민은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든든한 민주당!

- 1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의사의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강화한 '의료법'과 간호지원 체계의 변화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을 재정립한 '간호법'. 건보료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과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발병시 신속한 방역과 예방조치를 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 2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 3 국가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한 '재난안전법'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4 재외동포의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제405-5차)에서 우리당 중점법안과 현안법안 등 총 9건을 포함한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 의료법은 의료인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포함)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한 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해, 간호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위법행위 예방, 숙련된 간호인력 배치로 의료의 질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 간호법은 변화된 환경에 따른 간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으로, 간호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체계적인 간호 정책의 시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요양기관의 가입자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들에 대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은 질병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과 관련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 지방세기본법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우선변제의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로 확장됨으로써,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을 더욱 두텁게 도와줄 것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직접 인출해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사기와 투자자문·일임을 가장한 사기 등의 처벌수준을 강화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실질적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온전한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명시한 법입니다. 소상공인 전체를 피해복구 지원대상에 포함해 재난피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들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범위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확대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했습니다.

-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의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의 설치를 통해 재외동포사회 발전지원과 재외동포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유능하고 든든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 04. 27.



**정책위원회 의장 김민석**

| 번호 | 법안명<br>(법안 닉네임)                   | 주요내용<br>(카드뉴스)  | 비고       |     |
|----|-----------------------------------|---|----------|-----|
| 1  | 의료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인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 강화</li> <li>○ 병원급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의무화, 국가지원</li> </ul>  | 중점<br>법안 |     |
| 2  | 간호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규정</li> <li>○ 법정단체로서의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근거 규정 마련</li> <li>○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및 간호사 등의 권리 규정을 통해 권리 및 처우 개선</li> </ul>   | 중점<br>법안 | 복지위 |
| 3  | 국민건강보험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기관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li> <li>○ 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근거 마련</li> <li>○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환수·환급 근거 마련</li> </ul>   |          |     |
| 4  | 감염병의<br>예방 및 관리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 권한 부여</li> <li>○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휴가 부여</li> </ul>  |          |     |
| 5  | 지방세기본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보증금을 당해세보다 우선변제하여 전세사기 피해 구제</li> </ul>  | 현안<br>법안 |     |
| 6  | 재난 및 안전관리<br>기본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수 피해 입은 상가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난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li> <l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복구” 계획 수립</li> <l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손해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통하여 온전한 일상 회복이 되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li> </ul> | 중점<br>법안 | 행안위 |
| 7  | 전기통신금융사기<br>피해 방지 및<br>피해금 환급 특별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확장</li> <li>○ 대면편취형 사기 (직접 대면해 자금을 건네받는 행위), 투자자문 일임 가장 사기 등 처벌수준 강화</li> <li>○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제공 사업자의 관리 의무 강화</li> </ul>   | 중점<br>법안 | 정무위 |
| 8  | 재외동포기본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동포정책 기본 사항(목적, 정의, 기본방향) 규정</li> <li>○ 재외동포정책 추진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li> </ul>  |          | 외통위 |

| 번호 | 법안명<br>(법안 닉네임)  | 주요내용<br>(카드뉴스)   | 비고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 법제화</li> <li>○ 재외동포정책 수립·시행 시 재외동포 의견 청취 및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 등 규정</li> </ul>   |          |     |
| 9  | <p style="text-align: center;"><b>교통약자의<br/>이동편의 증진법</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확대</li> <li>○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li> <li>○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특별교통수단 환승 연계 체계 구축 현황 포함</li> </ul> | 중점<br>법안 | 국토위 |